

한국민주화 실험 비교연구*

— ‘1980년의 봄’과 ‘1987년 6월’을 중심으로 —

孫浩哲 (서강대)

1. 서론

20세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들풍 속에서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세계사적 대전환과 한국 자체의 전환이라는 이중의 전환 속에서, 낡은 것은 죽어거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 첨예한 갈등과 고통을 빚어내고 있다. 소위 ‘문민정부’에 이어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지만 경제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는 그렇다치고 치더라도 정치적 민주주의까지도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손호철, 1999 참조). 그리고 이같은 현실은 80년대 민주화라는 특수한 경로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은 이같은 현실과 관련해 80년대의 대표적인 한국민주화실험인 ‘1980년의 봄’과 1987년 6월 항쟁을 비교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왜 1980년 봄의 실험은 실패했고 1987년 6월항쟁은 성공했는가, 나아가 이같은 성공 속에는 어떠한 한계가 내장되어 있는가를 밝힘으로서 현재적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틀

‘변혁의 80년대’가 지나가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세계사적 시

* 이 연구는 서강대학교 1997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히며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서강대학교와 한국정당연구소의 조현연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간에 발맞추듯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의해 민주화는 80년대 이후 한국정치연구의 핵심주제로 자리잡아 왔고 전략선택이론 으로부터 세계체제론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적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임혁백; 성경용; 김호기; Cumings). 이들 이론들은 한국민주화의 이해를 한 단계 높혀준 반면 여러 이론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1997b, 376).

결국 이같은 이론적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해답은 한국정치의 구체적 역사, 특히 1980년 봄의 민주화의 실험 실패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공에서 찾아져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이 두 사례에 대해 간접적으로, 또는 이론적 함의를 통해 비교하고 있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다. 또 이 두 사례를 직접 비교한 연구 역시(임혁백) 핵심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서 두 사례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민주화의 동학을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두 사례를 1)토대, 2) 시민사회의 역관계, 3) 운동주체의 전략, 4)미국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4개의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표 1 참조).

<표 1> 비교연구 변수

비교 변수	구체 분석의 주요 초점
① 토대	자본축적의 성격·수준
	실물경제의 국면적 상황
	자본주의세계체제의 규정력
② 시민사회 내부의 역관계	사회적 지배계급의 태도
	‘중산층’의 동향
	민중운동의 강약의 정도
③ 미국의 전략과 역할	미국의 대 제3세계 전략
	한국 민주화에서의 역할
④ 운동주체의 전략	투쟁 목표(최대주의/최소주의)
	투쟁 방식(최대주의/최소주의)

다만 전제할 것은 이같은 변수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한국민주화의 동학과 인과관계에 대한 엄밀한 의미의 ‘이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다수의 변수대신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단일변수를 사용한 보다 강한 의미의 이론화 역시 민주화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화에 실패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기존 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논문은 위의 4개의 변수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민주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이론화로 나아가기 위한 느슨한 의미의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이 글은 ‘풍부한 서술(thick description)’과 엄밀한 의미의 이론을 매개하기 위한 중간수준의 이론화 작업이다.

3. 자본주의적 토대

민주화이론을 비롯해 최근의 사회과학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토대를 포함한 ‘구조’의 실종이다. 이는 그간의 구조결정론적, 특히 토대결정론적 사회과학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우파 토대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럽셋류의 근대화론이나 신식국독자의 상부구조=신식파시즘이라는 식의 좌파 토대결정론들은 모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나 선택이 진공상태 속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민주화가 토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구조결정론에 가장 적대적인 전략선택이론자까지도 한국 민주화는 “구조적 조건의 제약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략선택이론등 대부분의 한국민주화이론들이 ‘토대’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침묵해 왔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1980년과 1987년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토대를 자본축적의 성격과 수준, 실물경제 상황,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규정력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특정 국면에서 토대가 민주화의 실험을 어떻게 조건짓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1) 1980년 봄

1980년 당시 한국 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상대적 잉여가치의 수취를 통한

자본축적의 비중이 커지고 있었지만, 절대적 잉여가치의 수취를 통한 자본축적에도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저임금, 절대 노동시간, 민중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당시의 종속적 자본축적의 특성상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 자유민주주의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고도의 자본축적을 지속할 능력, 즉 '개량의 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면적으로 1980년 한국의 경제는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었다. 70년대 말부터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즉 "한국 자본주의의 외자 주도, 수출 주도, 그리고 석유 다소비형 종속적 재생산구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가 제2차 오일쇼크와 중첩되면서 엄청난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는 박정희체제 붕괴의 구조적인 원인 되었다. 더구나 박정희가 사망하자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한 국내외 자본의 투자 기피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었다. 그 결과 1980년 한국경제는 60년대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정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10·26 이후 80년 봄의 관련 경제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 1980년 봄 전후의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1978	1979			1980
		연간	1/4-3/4(평균)	4/4	
GNP 성장율	11.6	6.4	9.6	1.0	-5.7
고정투자 증가율	24.0	9.7	17.7	-5.8	-14.8
수출 증가율	26.5	18.4	20.5	13.1	11.6

* 비고: 1980년의 경우 분기별 자료가 없음. 1980년 수출의 경우 수출 촉진을 위해 연초 환율을 인상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처: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0』, 79쪽; 『경제백서 1981』, 64쪽.

<표 3> 10·26 전후의 제조업 가동률 (단위: %)

연도	월	가동률	연도	월	가동률
1979	9월	105.6	1980	1월	92.7
	10월	98.2(114.7)		2월	86.5
	11월	98.7(111.1)		3월	97.1
	12월	99.8(116.5)		4월	94.2
5월				96.2	

* 비고: 괄호 안은 1978년 같은 달 지수임.

* 출처: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위의 표들이 보여주듯이 국민총생산증가율, 고정투자증가율, 수출증가율, 제조업 가동률 등이 1979년 3/4분기까지에 비해 4/4분기에 들어 폭락하기 시작하여 80년에까지 이어진다. 특히 자본의 움직임은 보여주는 고정투자가 17.7% 증가에서 -5.8%, -14.8%로 급감소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출의 경우 80년 초의 환율인상 등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나, 신군부가 5·18 진압을 통해 민중운동을 패배시키고 집권하여 '안정'을 회복한 80년 9월 이후와 이전의 수출부문 지표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같은 경제불황, 이를 가속화시킨 국내의 독점자본의 (정치적 안정을 이유로 한) 투자기피는 중간계층들에게 경제회복을 위한 안정회구의 구조적 압력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간계층의 민주화운동의 불참여 내지 정치적 안정회구 심리를 이해하는 데서 결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당시의 경제적 국면의 특수성이었다.

토대의 문제와 관련해 또 하나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규정성 문제이다. 즉 해외독점자본의 움직임, 나아가 세계체제가 1980년 민주화실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이다. 10·26으로 독재자가 쓰러지고 사북 광부항쟁 등의 노동쟁의의 폭발, 학생운동의 활성화 등 민주화 요구들이 분출하여 나오자 당시 한국의 경제개발의 동력인 외채를 제공해 온 해외독점자본은 '투자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투자와 차관 공여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한편 관계자는 "학생과 노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정부가 나아 모든 것이 꽃피어나고

우리가 계속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램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¹⁾ 이와 관련, 국제금융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한 연구에 따르면 박정희 암살은 한국신용도의 하향조정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차관공여가 중단됐고 5.18의 비극 등을 거쳐 전두환 정권이 한국사회를 완전히 굴복시킨 뒤에서 처음으로 6억달러의 차관도입이 재개되었다는 것이다 (Sampson 1983, 223-225). 이처럼 외향적 산업화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고 종속성이 강한 한국경제에 대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규정력은 10·26 이후 80년 봄 가뜩이나 경제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사회에 일종의 ‘탈안정화(destabilizing)’를 초래함으로써, 군부에 의한 민주화 세력의 분쇄와 ‘정상적 투자’가 가능한 ‘안정 회복’ 지향의 구조적 조건을 유도했던 것이다.

(2) 1987년 6월항쟁

1970년대 말-80년의 상황과는 달리 87년 이후의 경우 한국의 상황은 종속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 잉여가치 수취를 통한 자본축적 등 그동안의 축적양식의 고도화됨으로서 개량의 물질 토대가 어느 정도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변화가 조절이론의 주장처럼 지배세력의 헤게모니전략, 즉 강제력에 의한 지배로부터 민주화를 통한 동의에 의한 지배로의 변화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객관적 조건으로서 작동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구조적 성격이외에도 주목할 것은 국면적 특징이다. 1987년 한국의 경제는 아래 <표 4>, <표 5>, <표 6>의 수치가 말해주듯이 이른바 ‘3저 호황’ 속에서 활황국면이었다. 87년의 주요 경제지표의 수치는 집회와 시위 등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수위가 높아지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강요된 일반 상식을 뒤집는 것이다. 즉 86년부터 90년까지 5년 동안의 GNP 성장률의 변화 추이와 관련, 1987년이 가장 높은 12.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또 국제수지의 경우도 87년의 수치는 86년에 비해 50억 달러 이상 증가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 12, December 1982, p.40.

<표 4> 1980-1986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추이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GNP 성장률(%)	-3.9	5.5	7.5	12.2	8.5	6.6	11.9
국제수지(100만 달러)	-5,321	-4,646	-2,650	-1,606	-1,373	-887	4,617

*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 월보』, 각호;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 회상 변화』, 1998, 117쪽; 한국은행, 『국민계정』

* 출처에 따라 수치상의 차이가 있음에 주의

<표 5> 1986-1990년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추이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GNP 성장률(%)	11.9	12.3	12.0	6.9	9.6
국제수지(100만 달러)	4,617	9,854	14,161	5,055	-2,169

*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 월보』, 각호;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 회상 변화』, 1998, 117쪽;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편 1987년 월별 수출입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아래 <표7>의 수치 또한 3월부터 시작된 6월 민주화대항쟁과 연이어 전개된 7-8월 노동자대투쟁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표 7> 1987년 월별 수출·수입 변화 추이 (단위: 100만 달러)

	1987 (수출: 47,280.9) (수입: 41,019.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2,831.4	2,900.9	3,637.7	3,569.1	3,804.4	4,241.2
수입	2,306.4	2,741.5	3,120.3	3,341.1	3,617.5	3,539.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출	4,224.4	3,478.6	4,440.7	4,041.7	4,423.8	5,244.8
수입	3,623.9	3,489.3	3,671.0	3,392.6	3,836.4	4,300.4

*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 월보』, 각호

이처럼 80년의 경우와는 달리 87년 6월항쟁의 경우 3저호황에 따른 경제적 활황국면이 경제적 침체를 우려하는 중간계층의 보수화 경향을 어느 정도 차단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3저호황 아래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의 과실이 돌아오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중간층의 시위 참여 표출됐다는 해석(기사연 1987, 82 참조) 또한 가능하다.

한편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규정력의 경우 87년의 경우에도 종속성은 남아 있었지만 그 규정력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커밍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8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독점자본은 군사독재가 제3세계 경제발전에 기능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화를 선호하는 ‘민주화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민주화에 대해 우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었다(커밍스, 1989). 즉 한국과 같이 성공적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해서 미국독점자본은 강력한 권위주의국가에 의해 보호되어 온 국내시장을 개방시킬 필요를 느끼는 바 한국의 탈권위주의화는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미국상품에게 개방하라는 강력한 요구의 당연한 정치적 귀결”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외인결정론적 시각이지만 이같은 변화가 87년 민주화이 기여한 한 요인인 것만은 사실이다 (아래 미국의 전략 참조).

4. 시민사회 내부의 역관계

많은 제3세계의 민주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즉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간의 인과관계는 매우 모호하며 이 둘을 잇는 구체적인 동학은 ‘실종된 고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성장’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시민사회내의 민주화세력과 반민주적인 지배계급 세력간의 역관계,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가와 지배계급의 지배연합대 민중세력간의 역관계이다(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1997c 참조). 재벌 등 자본가계급이 서구와 달리 부르주아혁명의 주체가 된 적이 없는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 자체가 민주화를 놓고 계급적으로 균열되어 있어 왔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

다. 다만 여기에서 역관계란 산술적 수나 조직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조직력 등에 기반한 헤게모니와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재벌은 민주화의 결정적 순간마다 항상 독재의 편에서 왔고 시민사회 내에서의 그 힘 역시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고정변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주로 민중운동의 힘과 중산층의 정치적 태도와 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1980년 봄

시민사회의 역관계와 관련해, 80년 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중운동의 취약성이었다. 10·26 이후 5·17에 이르는 기간은 유신독재라는 암흑과 공포의 흑한기를 견디며 살아남은 기층민중운동이 활발한 모습을 드러낸 시기이자, 동시에 그 조직적·정치적·이념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등 기층 민중운동은 분단상황에서 연유한 특수성, 국가의 억압적인 국가조합주의적인 통제 등으로 인해 미발달한 상태였다. 따라서 YH사건, 부마항쟁이 보여주듯이 민중운동은 유신체제에 타격을 가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후 80년 봄을 거치며 사북 광부항쟁 등 과거에 비해 폭발적인 형태로 터져 나왔으나 그 힘이 아직도 미약했고, 그 수준의 저급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경제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김진균·정근식 1990, 81-90 참조).

한 예로 노동운동의 경우 총괄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의 경제투쟁이 압도적이라는 한계와 전국적인 연대조직도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운명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진로를 놓고 벌어지고 있던 독재 대 민주 사이의 일대 회전에 있어서 전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둘째 중산층의 보수적 태도이다. 특히, 60년 4·19 때나 87년 6월의 상황과는 달리 80년의 봄은 외부의 힘이 개입하기 이전에 내부의 힘의 작용에 의해 좌절된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장집 교수의 지적처럼, 4.19 때 87년 6월항쟁과 달리 80년 봄이 “보여준 중대한 정치적 의미는 유신체제에 대한 중심적인 반대세력으로서 학생데모가 충분히 예견할 만한 결과로서 그 절정을 향하여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이 서울에 있는 중심적인 사회계층인 뿌띠 부르주아 및 신중산층의 호

응을 받지 못하였다는, 즉 그것이 아마도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어떤 단초적 계기를 마련하였을지도 모를 학생을 비롯한 반체제집단과 중산층 및 공식·비공식 부문의 사회 저변층의 연합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는”(최장집 1985, 49) 것이었다.

다시 말해 중간계층, 특히 신중산층이라고 불리는 계층은 80년 당시 87년에 비해 양적으로도 훨씬 덜 성장해 있었고, 정치적인 입장도 그 ‘양면성’ 중 보수적인 입장이 지배적인 형태로 되어 원칙적으로는 민주화를 바라보면서도 중소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경제회복을 위한 정치적 안정화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중간층의 태도에는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의 경제적 국면의 특수성, 즉 경제위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군부와 재벌의 연합에 대항한 민주화투쟁은 학생운동과 소수 재야명망가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수 민중이 동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줄고 1997a, 356). 또 이 점에서 1980년의 신군부의 집권은 호세 누(José Nun 1967)의 ‘중산층의 지지에 의한 쿠데타’에 가깝다 할 수 있다.

(2) 1987년 6월항쟁

87년 6월 항쟁당시 민중운동은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80년 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다. 80년의 패배에 대한 처절함, 5월 광주에 대한 집단적 기억, 그리고 공통의 역사적 학습(historical learning) 속에서 이른바 ‘80년 5월 세대’가 성장해 왔다. 민중의 선봉대를 자임한 80년 5월 세대의 ‘원죄의식’에 가까운 집단적 기억은 “열사 앞에 살아 있는 부끄럽다. 열사 앞에 우리의 고개를 자신 있게 들 수 없다. 처절하게 죽은 열사 앞에 살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끄러울 뿐이다”(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1991, 327)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80년의 패배는 의식화와 조직화의 측면에서 8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운동의 자양분이 되어 왔다. 의식의 면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변형 저항적 의식이 짝뜨게 되고, 또 조직화의 측면에서는 83년 민청련을 필두로 각 부문별로 민중운동의 공개적 조직화가 이루어지고,²⁾ 85년에 이르러서는 민중·민주·통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선도할 조직으로서 민통련이 결성되기에 이른다. 민중운동의 지역적 조직화도 활성화되었다. 각 지역운동의 경우 민통련의 지역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민중운동의 통일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올바르게 결합시키는 것을 지향하였다.³⁾ 바로 이러한 실천적 성장에 바탕 하여 국민운동본부가 87년 5월 27일 결성되고 6월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87년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은 반독재 저항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심의 이반현상이 특정 집단 또는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저변에 깊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즉 “민심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 도저히 기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다. 기사의 예측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타협안은 민심에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마다 전부 배척되고 있다. 민심의 이반 속도는 무서울 정도” 라는 것이었다(월간조선 특별취재 반 1987, 164).

한편 6월항쟁기에서 이른바 ‘중산층’이 국내의 언론의 각광을 받았는데, ‘중산층의 반란’, ‘중산층혁명’, ‘중간계급혁명’으로 대서특필되었다. 즉 도시중산층이 대학생들을 응원하면서 대거 거리로 나왔으며, 중소상인과 이른바 ‘넥타이를 맨 사람들’의 시위란 점에서 사태는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소상인과 사무직 노동자가 투쟁에 대거 참가한 데에는, 3저 호황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던 것도 상당 정도 영향을 미쳤다(기사연 1987, 88)고 한다.⁴⁾

-
- 2) 83년부터 86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조직된 민중운동단체로는, 민청련, 해직교수협의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민족문화운동협의회, 민중·민주운동협의회, 민주·통일국민회의,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맹,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중불교운동연합, 민통련 서울지부, 서울노동운동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민주교육실천협의회,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등이 있다.
 - 3) 지역운동협의회는 86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개헌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운동단체의 출범과 성장 및 전국적 통일성과 연대의 형성은 87년 국민운동본부가 각 지역에 설치될 수 있었던 인적 자원과 지역별 투쟁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6월항쟁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분산시켜 주고 각 부문이 탄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형성해 주기도 했다(조현연 1997a, 98).
 - 4)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한국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중간층의 양면적 태도를 꼽을 수 있다. 80년과는 달리 87년 6월의 경우 이들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대오에 합류했다는 사실과, 그러나 그 직후 전개된 7-8월 노동자대투쟁

물론 이러한 저항의 움직임과는 전혀 상반된 사회적 흐름이 시민사회 내부에 부분적으로 존재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4·13 호헌조치에 대한 지지성명으로 표현되었다. 첫 지지 성명은 4월 15일 재벌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선진경제 달성과 정치·사회 발전을 위한 경제계의 의견’이란 성명이었다. 이 밖에도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온 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랐다. 또 극우반공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반공연맹, 이북5도민회중앙연합회, 실학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 광복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등도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4·13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4월 23일에는 한국노총도 “이번 특별담화는 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시기적절한 결단으로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논지가 군부독재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점점 더 지배블록 전체의 급속한 고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 결과가 6.19 항복선언이었다.

에 대해서는 보수적 태도로의 돌변과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적 자세로의 급속한 변화를 보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중산층이 6월항쟁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군부독재 타도’, ‘민주쟁취’라는 구호 속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의미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국가의 억압적 폭력의 배제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시민민주주의 수준의 그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민주주의, 그 최소 수준을 넘어서는 계급적 이슈와 계급정치의 등장에 대한 중간층의 일차적 반응은 자본주의 질서와 지배적 사회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급진주의’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공포였다. 그 결과는 민중부문의 계급적 분화와 계급적 균열의 표출로 나타났다. 민중부문의 계급적 균열의 표출은 그동안 미분화되어 있던 민중부문이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성장에 바탕하여,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 계기를 통해 분화현상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즉 기층민중과 중간층의 사회적 분화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분화가 그것으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조건 하에서는 물질적 사회집단의 범주로서 민중은 훨씬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중산층은 훨씬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최장집 1989, 298)는 것이다.

5. 운동 주체의 전략

전략의 문제는 기존의 민주화 논의에서 가장 부각된 부분으로서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모든 운동에서 전략의 문제는 투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건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객관적 조건이란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가, 그것이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내재해 있는 가능성을 조건짓고 그 한계를 설정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주체의 전략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략을 투쟁 목표와 투쟁 방식 각각을 최대주의와 최소주의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1) 1980년 봄

전략선택이론에 따르면 80년 봄의 좌절은 한마디로 12·12에 의한 “지배세력 내에서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서의 자율적인 온건파의 소멸과 민주화 추진세력의 전략적 대안조직의 실패”의 결과라는 것이다(임혁백 1990, 64). 그리고 여기서 대안조직의 실패는 재야가 제도권 내의 투쟁을 주장한 ‘점진주의자’와 대중동원의 거리투쟁을 주장한 ‘행동주의자’로 분열된 현실, 투쟁방식에 대한 최대주의자와 최소주의자의 분열에 기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80년 봄에 있어서 신군부의 승리에 의한 온건파의 소멸은 유신체제의 정치군인의 배태에 다른 군부의 역관계의 구조적 산물로서 ‘주어진 조건’이었지 그것이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다. 즉 신군부는 유혈의 12.12 군사반란에 의해 군부를 장악함으로써 ‘타협에 의한 민주화’란 물 건너간 것이 되 버렸고 신군부로서는 강경론(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권장악)만이 선택치로 남아 된 것이었고 이것은 민주화운동으로서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조건이었다.

따라서 전략선택이론은 재야와 정치권의 분열을 실패의 이유로 주목함으로써 이들이 ‘최소주의적’ 입장으로 단결되었다더라면 민주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전략선택이론의 가설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12.12에 의해 이미 체제내의 온건파가 소멸했기 때문에 ‘타협에 의한 민주화’는 물 건너 간 것이고 따라서 남은 대안은 반대세력의 온건파 중심의 최소주의적 단결이 아니라 강경파 중심

의 최대주의적 단결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의 선택(손호철 1997b, 385-386)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80년의 경우 민중운동과 민주화세력은 전략적 선택의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신군부는 유신체제의 해체와 문민정부로의 정권 이양을 지지하던 당시 군수뇌부 등 ‘다수 온건파’를 누르고 군을 장악하기 위해 12·12 군사반란을 성사시키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유혈사태를 빚고 마는 순간 이미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고 너무 많은 ‘판돈’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을 장악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즉 그들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다(손호철 1997a, 358). 이러한 상황에서 신군부에게 선택의 관건은 개입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니라, 개입의 가장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군부는 5·17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12·12사태를 계기로 이미 권력을 잡았다. 5·17계엄확대조치는 그 뒤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권정달의 증언(조갑제 1990)은 정곡을 찌른 정확한 분석이다.

그러나 12·12 이후에도 학생, 야당 등 민주화세력은 “‘밑으로부터의 민주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 ‘타협적 민주화’도 아닌 어정쩡한 전략”을 추구하는 전략적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먼저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욕이 문이 멀어 적전분열을 했을 뿐 아니라 제도정치권에서 최소주의적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학생운동과 재야에 대해서도 이를 설득하는 오류를 범했다. 양김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당시의 정세에 대한 안이한 낙관론에 매몰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미 최소주의적 대안은 물건너 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군부에 구실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최대주의적 투쟁방식을 오히려 비판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었다. 특히 안이한 낙관론은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미국의 표면적 입장을 액면 그대로 믿은 ‘순진한 대미관’에 크게 기인하는 바 이들은 미국의 공식입장에 한껏 고무된 채, 어떻게 하면 미국의 환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 주한 미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내는 80년 1월 29일 비밀문서에서 잘 나타나 있다.⁵⁾

5) 이 비밀문서의 보고 내용 가운데는 “(한국의) 모든 중요 정치세력이 미국의 지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구절(한겨레21 96/04/11, 94)이 있으며, 또 주한 미대사인 글라이스틴은 미국의 영향력을 의식해 자신에게 접근한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과 재야 인사, 군

다음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의 경우 5·15 서울역 ‘회군’이 결정적 오류였다. 물론 민주화세력이 당시 회군이 아닌 정면승부를 택했다라면 군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했을지 모른다. 또 그 경우 민주화세력이 승리로 그것이 귀결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후에 ‘5·18’이 보여주었듯이 운동주체의 전략과는 무관하게 당시의 상황이 어차피 정면대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이 경우 5·18보다는 승리의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며 설사 패배했다라도 그 충격은 5·18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라는 점과, 나아가 그 경우 5·18과 같이 지배세력이 문제를 특정 지역의 ‘지역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손호철 1997a, 358-359 참조).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자 3인 비밀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심재철은 88년-89년 국회청문회에서 이렇게 진술한 바 있다.

5월 15일 서울역에서 학생들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과오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오류가 광주에서 대학살로 이어져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운동의 최선봉에 나섰던 저로서는 완전한 패배이었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최석우 1996, 123 재인용).

(2) 1987년 6월항쟁⁶⁾

한편 87년의 경우 전략적 선택론은 노태우로 대표되는 체제내의 개방파가 존재했고 반대세력 역시 “민주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연기하고 모든 노력을 직선 대통령제로의 헌법개정에 집중”하여 ‘최대다수연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타협에 의한 보수적인 민주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반대세력의 ‘최소주의적 전략’이 민주화의 성공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가 되어왔듯이 87년 당시 체제내의 개방파가 존재했느냐, 또 그 세력이 노태우세력이나냐는 따져볼 문제이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것은 87년 성공은 최소주의적 입장에서 재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구결꾼들’(한겨레신문 96/03/06)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6) 이 부분은 (줄고 1997b, 386-388)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단결하여 대안을 조직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대주의’와 ‘최소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그 기준이다.

우선 주목할 것은 이미 필자가 다른 글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80년에 있어서 최대주의/최소주의와 87년에 있어서 최대주의/최소주의의 기준이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80년의 경우 제도정치권 내에서의 투쟁이나 가두투쟁이냐는 ‘투쟁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인 반면, 87년의 경우 직선제 쟁취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복원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급진적 목표를 내거느냐는 ‘투쟁목표’(요구강령)를 기준으로 한 분류라는 점이다. 이에 비춰볼 때 분명 87년 6월항쟁은 투쟁목표에서 최소주의적이었다. 그러나 실패한 80년의 경우도 동일하다. 사실 당시에는 민주화의 내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모두 ‘시민민주주의’ 수준의 최소주의자였다. 즉 80년의 민주화운동세력 내의 논쟁은 투쟁방식의 최소주의와 최대주의의 논쟁이었을 따름이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87년은 최소주의적으로 단결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80년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식으로 두 민주화 실험을 단순히 연결시켜 설명할 경우 이념적 목표를 중심으로 한 최소주의적 단결 여부가 80년의 실패와 87년의 성공을 결정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광범위하게 유포된 잘못된 경향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즉 투쟁목표라는 점에서는 80년도 87년도 모두 최소주의적으로 단결되어 있었다고 할 때,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차이는 투쟁방식이다. 즉 80년의 경우 투쟁방식에서 최소주의와 최대주의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었던 반면 87년은 재야가 단결하여, 나아가 정치권도 가담하여 거리로 뛰어나오고 ‘최대주의’로 단결했던 것이다. 즉 일반적 통념과 달리 최소주의가 아니라 최대주의로의 단결이 87년을 80년과 구별해 주는 민주화의 성공 원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87년 민주화는 지배세력의 온건파와 반대세력의 온건파 간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배블록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경파의 입장을 고수했고 반대세력 역시 투쟁방식에서 최대주의적으로(투쟁목표에서는 최소주의적이었지만) 단결하여 이양자가 정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민주화 지지까지 겹쳐져 힘의 역관계가 반대세력의 우위로 나타남에 따라 반대세력이 지배블록을 온건파로 변신하

도록 강제한 결과이다. 즉 87년 봄의 신군부의 전략적 선택은 처음부터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아니었다. 그들의 1차적 선택은 호헌선언이었고 6월항쟁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적 선택은 군을 동원한 6.20일을 기한 위수령 발동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선택은 최후의 순간에 미국의 압력 등에 의해 군동원의 취소와 6.19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도 힘의 역관계가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이 ‘투쟁방식에서의 최대주의’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

80년의 봄과 5월 광주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85년 이후 이어져 온 지속적인 개헌 요구와 투쟁, 여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 조치, 5·18 폭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배블록에 대한 민중의 심리적 공분과 광범위한 도덕적 저항이 일어나고, ‘호헌 철폐·독재 타도’에 대한 대중적 공감의 확산되어갔다. ‘호헌과 군부독재의 장기 집권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느냐’ 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지배블록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수 있는 구심체를 건설하는 것은 범민중적인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마침내 민중운동의 주도 속에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국민운동본부는 ‘6·10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 및 호헌철폐 규탄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이후 5일 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 ‘6·18 최루탄 추방대회’, ‘6·26 국민평화대행진’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의 정치적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투쟁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고, 특히 6월 18일의 시위는 대중투쟁의 승리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면서 19일에서 21일에 이르는 시위는 그 절정을 이루었다.

한편 4·13 호헌조치 이후 대중투쟁이 고양되자 보수야당은 ‘선명투쟁에 의한 현상 돌파’와 ‘대화에 의한 파국의 예방’이라는 상충된 선택의 기로에서 왔다갔다했다. 전자의 선택에 있어 그 시기와 강도는 전적으로 민중운동 쪽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었고, 후자의 선택도 대화의 상대방이 응해줘야 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수야당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일단 ‘선명투쟁과 함께 실질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양다리 걸치기’식의 방침을 선택했던 것이다.⁷⁾ 이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는 “재야

7) 보수야당의 이중적 태도는 6월항쟁 전 과정에서 지배블록의 눈치를 살피면서 지속적

와는 연대해서 투쟁할 것이지만 단일한 조직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면서 민중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다. 국민운동본부 결성 과정에서조차 그러한 태도는 여실히 드러났는데, 처음에 보수야당이 국민운동본부 결성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민중운동의 진보적 성격이 지배블록과의 정치협상에서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이들조차도 무엇보다 지배블록이 이들을 협상의 파트너로조차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 설 땅이 없어지게 되자 민중운동과의 조직적 연대로 방향을 급선회하여 민중운동의 최대주의적 투쟁에 동참하게 되었다.

어쨌거나 민중운동의 전략, 즉 최소주의적 투쟁 목표와 최대주의적 투쟁 방식의 결합은 민중운동진영의 힘의 성장과 함께 80년 봄과 달리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끈 주요한 요인이다.⁸⁾

으로 대화를 제의한 데에서도 단적으로 입증되기도 한다. 이들의 대화 제의는 고조된 민중의 투쟁 열기 속에서 위기감을 절감하고, 혁명적 민중봉기 등의 발생으로 인한 정치적 ‘파국’을 막으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8)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연구자의 문제제기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즉 6·26 국민평화대행진의 구호인 ‘직선제로 독재 타도’로 상징되는 문제이다. 그에 따르면, “이 구호에는 지배블록의 타협안인 ‘4·13의 사실상 철회’ 정도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민중들의 단호한 거부가 들어 있음과 동시에,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목표가 직선제 개헌으로 축소되는 결절점이기도 했다. 국민운동본부 쪽에서는 즉각적으로 6·26대회의 성공을 선언하고 나섰고, 방송을 제외한 주요 언론매체에서도 ‘시민의 승리’로 판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제 민주화가 대세로 굳어졌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으며, 남은 것은 지배블록의 결단뿐”(안상수 1995, 258)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크나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남은 것은 지배블록의 결단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주요 변수로서 민중운동 지도부의 올바른 판단과 결단 또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시위의 물결을 이후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몰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운동 지도부의 결정과 결단은 어떻게 보면 당시 정국의 향배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성공’과 ‘승리’에 너무도 쉽게 안주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들의 기본 입장은 일단 직선제 개헌 쟁취와 선거를 통한 군부독재 ‘중식’(군부독재 ‘타도’가 아니라) 및 민선민간정부의 수립에 있었다. 따라서 민중의 힘을 지속적인 비타협적 투쟁을 통한 군부퇴진/타도로 상승시키려는 실천적 의지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민중운동 지도부는 결정적 국면에서 선거혁명의 환상과 직선제 개헌에 매몰됨으로써, 군부의 재쿠데타에 대한 ‘관념적 공포’ 속에서, 그리고 주체역량과 아타간의 역관계에 대한 성급한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지속적인 아래로부터의 비타협적 투쟁을 통한 군부독재 타도/퇴진의 가능성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일찍’ 포기해 버렸다”(조현연 1997a, 155-156; 224 참조)는 것이다.

6. 미국의 전략과 역할

미국의 직간접적인 강력한 영향 아래 있어 온 한국의 국내정치, 특히 정치적 전환국면에서 미국의 존재 그 자체나 구체적 행위는 정치변동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헌팅턴(Huntington 1991)에 따르면,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은 민주화의 중요한 촉진자로서,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의 의식적이고 직접적인 행사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80년 한국의 예를 포함한 많은 제 3세계의 경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쨌든 미국의 대한 전략은 80년과 87년의 민주화실험이 각각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1980년 봄

80년 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세계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79년 박정희의 암살, 80년 5월의 광주와 신군부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 전개는 군사주의의 퇴조를 바탕으로 깔고 인권외교정책을 앞세웠던 카터 행정부 때의 일이었다.⁹⁾ 그러나 카터행정부는 10.26이후 사태의 대응에 있어서 인권외교정책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추구했다. 이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은 세계정세였다. 중동지역의 친미체제를 지탱해왔던 이란의 샤 체제의 급속한 붕괴, '소모사 없는 소모사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카터의 구상을 무산시킨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정권의 등장 등은 '무기력한 미국'을 증명하는 셈이 되어 카터를 심각한 궁지로 몰고 갔다. 즉 전자의 사태는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을 그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이었으며, 후자는 쿠바혁명에 뒤이어 미국의 앞마당에까지 '좌익세력'이 침투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카터 행정부는 79년 4월부터 제3세계 외교정책을

9) 카터시대 인권외교의 일시성과 이중기준에 대해서는, 이삼성, 「미국과 제3세계의 정치변동」,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한길사, 1993) 참조. 이삼성은 “카터의 인권 압박은 친미독재정권이 맑스주의 정치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의존해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그 결과 카터의 인권외교는 라틴 아메리카에만 한정되는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 불과했다”고 말한다(88).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해, 비밀리에 일련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를 거쳐 6월경에 정책의 변화에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 그 주안점은 ① 현재 제3세계에서의 미국의 이해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바, ② 미국은 좀 더 강력한 무력대응을 펼쳐야 하며, ③ 제3세계의 분쟁지역에 신속배치군(RDF: Rapid Deployment Forces)을 파견하는 조치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른바 ‘카터 독트린’은 내부지침 수준에서 비밀로 되어 있다가 79년 11월 이란 인질사태와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라는 사태를 거치면서 80년 연두 교서로 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 여기서 카터는 “미국의 이해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포함하여 그 어떤 수단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초강경한 표현을 구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발언은 제3세계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국익에 손상을 주는 격변적 상황에 대한 군사적 해결 가능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었으며, 나아가 인권외교의 기초를 포기한 채 ‘신보수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메시지가 제3세계 군부세력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주 고무적인 것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민주화 과정에서 이란이나 니카라과의 경우처럼 될 것을 우려, 반작용을 가져오더라도 친미·반공적인 신군부세력의 강력한 지도력을 확립해줌으로써 자신의 정치군사적·경제적 이해를 확실히 보장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기초는 이후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이르르면 커크패트릭 독트린으로 알려진, 즉 “제3세계의 어떤 독재이든 반미 내지 공산독재보다는 낫다”, “친미반공이라면 독재정권이라도 지원하겠다”는 노선으로 확립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노선 아래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10·26 직후부터 미국은 행정부 내 고위관리들로 암호명 ‘체로키(Cherokee)’라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골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상황과 인물들에 대한 주도면밀한 평가작업과 함께, 국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미국 국익을 관철하려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조인과 요구를 한 것, 5·18 민중항쟁에의 군 병력 투입에 대한 승인 및 지지 통보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방안 협의¹⁰⁾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글라이스틴의 말처럼, 미국

10) 「미국은 한국의 진압을 알고 있었다」는 제목으로 광주문제를 특집기사로 다루고 있는 1996년 2월 27일자 <저널 오브 커머스>지에 따르면, “80년 5월 22일 소집된 백악관

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과 12·12 군사변란 이후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에 안정적인 바탕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적극적인 활동가”가 되어버렸던 것이다(한겨레신문 96/03/24 재인용). 나아가 비밀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미국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사회불안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수야당과 재야 및 학생운동을 사회불안의 구체적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도전과 야당정치인들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한국 내 불안의 상당 부분이 발생”, “수는 적지만 학생들을 이용해 말썽을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세력으로서의 재야”, “재야의 요구에는 상승적인 형태의 과격한 요구” 등의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다(한겨레신문 96/03/06 재인용). 결국 한국의 민중에게 희망으로 다가온 ‘80년 서울의 봄’은 미국에게는 단지 ‘혼란의 봄’으로 비취졌을 따름인 것으로, 그 결과 ‘혼란의 봄’을 단지 말 뿐의 ‘안정의 봄’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이다.

(2) 1987년 6월항쟁

미국은 레이건 2기 행정부가 들어선 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초기의 ‘커크패트릭 독트린’에서 ‘저강도 전쟁 전략(Low Intensity Strategy)으로 제3세계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¹¹⁾ 즉 위에서 소개한 미국독점자본의 변화한 세계전략에 따라 민주화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제 3세계전략의 수정을 가져오는 바 87년 봄의 미국의 대한전략은 이의 한국적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더 이상 한국의 군사독재세력을 지지했다가는 80년대 들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반미운동이 위험수위에 이른다는 판단아래 체제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노선이었다. 이는 우선 86년 4월 14일 국무장관 슐츠를 통해 “어떠한 독재세력에도 반대하며 민주적 중도세력이 필요”하다는 건

의 한 회의에서는 사태가 통제불능으로 악화될 경우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협의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는 국무장관 에드먼드 머스키, 국무부 부장관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부 차관보 리처드 홀부룩, 국가안보 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국방장관 해럴드 브라운, 합참의장 데이비드 존스 및 중앙정보국장 스탠스필드 터너가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신문 96/02/29).

11) 저강도 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임재경·폴 마틴 외, 『저강도 전쟁』 (민중사, 1987); 전원하 엮음, 『저강도전쟁의 이론과 실제-미국의 반혁명 수출과 제3세계 전략』 (친구, 1990) 참조.

해로 나타났으며, 이후 7개항의 조건부 내각제 구상을 알려져 있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의 출현과 그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분열·파괴도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¹²⁾

그 뒤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왔는데, 그 신호는 대체로 친미는 아니더라도 반미는 안된다, 군부가 배척하는 인물은 안된다, 철저한 의회주의자여야 한다, 집권을 하더라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조세형 1987, 137). 한편 6월 16일의 국무성 브리핑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희망하면서 ‘한국인 자신에 의한 스스로의 체제 선택’ 등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는 등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신중하였다. 이 때까지 줄곧 ‘현상존중’의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미국 국익의 안정적 보장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온 ‘현존하는 실세’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6월항쟁이라는 전면적 투쟁으로 폭발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미국은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정책과 결별하고, 공개외교, 즉 적극적인 개입과 공개적인 압력의 자세로 전환했다. 여기에는 과거의 “안보가 중요한 모든 것이며 민주주의는 또 다른 북한의 침략 초래를 가능케 할 수 있어 한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민주화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만큼 최우선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의 인식상의 전환이 깔려 있는 것이었다. 특히 6월 18일 이후의 전국적인 시위 사태, 특히 부산의 거대한 시위에 접한 레이건은 6월 19일 특사를 파견하여 전두환에게 친서를 전달,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정치상황에 특사까지 파견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한 데에는, 80년 5·18 민중항쟁의 유혈진압 당시 미국이 취한 태도가 ‘반미의 무풍지대’인 한국의 민중운동세력들로 하여금 반미투쟁을 전개하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비유해보건대 ‘죽은’ 80년 5월의 광주

12) 미국은 이민우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개스틴 시거는 87년 2월 6일 한미협회 연설을 통해 “한국은 문민정부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미국의 희망을 표시하면서 “여야 대결을 해결하는 혁신적 방안의 타협안 수용”을 촉구했다(월간중앙 90/4, 171). 여기서 혁신적 방안이란 것은 물론 이민우 구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가 '산' 미국의 발목에 족쇄를 채웠던 것이다. 이 레이건의 친서는 그 내용보다 친서전달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주는 효과가 훨씬 컸다.

6월 20일에는 국무차관 더윈스키가, 6월 23일에는 한국문제의 실무 책임자인 시거 차관보가 급거 방한하여 한국문제의 '새로운 해결'을 위해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군부개입 반대, 한국사태의 평화적 해결, 민주발전의 이룩'에 대한 미국의 희망을 국내 인사들을 만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나섰다. 또 6월 22일 국무성 정오 브리핑을 통해 유례없는 직설적 표현으로 군대의 사태 개입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높은 강도의 메시지를 보내 한 때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¹³⁾ 나아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는 6월 24일 한국에서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 경제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한 '87년 한국민주화법안'을 통과시켰다(조선일보 87/06/25). 이밖에도 당시 CIA관계자로 일했던 한 증인의 경우 미국이 탱크를 동원, 위수령에 출동하는 탱크를 저지하는 무력시위를 벌려 위수령을 취소하도록 했고 6.29선언 역시 미국이 만들어 전두환과 노태우에 강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김용일)

7. 결론

이 글은 위에서 80년 봄의 민주화 실험의 실패와 87년 6월 항쟁의 성공을 토대, 시민사회의 역관계, 투쟁전략,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13)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현재의 한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이 개입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군의 지휘관들은 국방에만 전념하고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정치과정이 전개되도록 하라’며 촉구했다.”(동아일보 87/06/23) “미국의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미 국무성은 6·10사태 이후 한번도 이번 사태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같았으면 ‘북한은 기회를 악용하지 말라’는 성명이 나왔을 법한데, 이번 사태 속에서는 일체의 대북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기자들의 북한 관련 질문에도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은 국무성의 이같은 태도가 군의 사태 개입을 예방하려는 세심한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서, 군사쿠데타나 계엄령 같은 비상조치에 명분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국무성의 방침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선일보 87/06/27)

비교 단위	구체 분석의 주요 초점	80년 민주화 실험	87년 민주화 실험
①	자본축적의 성격·수준	저임금, 절대노동시간, 민중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종속적 자본축적	상대적 잉여가치에 바탕한 자본축적 상대적 종속 완화
	실물경제의 국면적 상황	'위기' 국면	'3저호황'의 경제 활황 국면
	자본주의세계체제의 규정력	친 군부독재	군부독재에 대한 상대적 비판
②	사회적 지배계급의 태도	권력친화적	권력친화적
	'중산층'의 동향	운동에 대한 거부	운동에의 참여
	민중운동의 강약의 정도	취약	양적·질적 성장
③	미국의 대 제3세계 전략	커크패트릭 독트린	저강도 전략
	한국 민주화에서의 역할	민주화 저지에의 기여	이행에의 부분적 기여
④	투쟁목표 (최대주의/최소주의)	최소주의의 투쟁목표	최소주의의 투쟁목표
	투쟁방식 (최대주의/최소주의)	최소주의의 투쟁방식	최대주의의 투쟁방식

앞의 이론적 전제에서 지적했듯이 위의 분석들은 4개의 핵심변수에 대한 평면적인 비교분석일 뿐 이를 넘어서 한국민주화의 인과적 동학에 대한 엄밀한 의미의 이론화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서구의 민주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한 연구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중 '민주주의' 부분은 노동자계급 등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이를 수용할 수 있었던 현대 자본주의의 팽창성과 탄력성의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G. Therborn 1977).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80년 봄의 경우 전략적 선택이 오류 등 앞서 지적한 여러 요인들이 작동한 것이 사실이지만, 크게 보아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80년의 좌절은 밑으로부터의 투쟁의 미성숙과 민주화를 수용할 수 있는 팽창성과 탄력성의 결여라는 당시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87년 민주화의 실험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상대적 성숙과 민주화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팽창성과 탄력성의 확보라는 당시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양대 민주화 실험 결과가 가져온 일종의 역설과 관

련된 것이다. 비유하자면 실패(패배)가 성공(승리)의 어머니라면, ‘반쪽의 성공(승리)’는 그 이상의 ‘실패(패배)’를 내장할 수 있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현대사에서 최대의 비극이 ‘80년 5월의 광주’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유신독재의 붕괴를 계기로 분출된 80년 봄의 민주화 열기가 5·17 군부쿠데타로 무산되고, 이에 저항한 광주 민중들의 항쟁은 신군부의 강철군화에 의해 좌절되어버림으로써 ‘80년 5월 광주’라는 역사적 비극의 씨앗을 잉태했다. 그러나 5월 광주는 신군부에 의한 무혈 권력장악 시도를 좌절시켰고 이들로 하여금 정치개입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이 요소는 지배블록의 탄압 수준을 극도로 높게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민중운동의 투쟁의 강도를 극도로 고양시킴으로써 이후 정치변동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이것은 전두환 5공독재의 역사적 정통성을 박탈하고 변혁지향적인 민중운동의 등장과 반독재 투쟁의 가속화에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장래에 다가올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변수가 되었던 것이다(최장집 1989b, 203). 다시 말해서 5·18 민중항쟁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실패나 패배라고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중역량이 역사의 전면에 재등장하는 계기였다. 나아가 그것은 한국 민주화투쟁의 거봉이자 민중운동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87년 6월 민주화대항쟁의 밑거름이기도 했던 것이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 역설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민주화의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87년 6월 항쟁은 군부독재의 청산과 함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위에서 새롭게 민주정치가 시작된 경우가 아니라, 지배블록과 보수야당이 잠정적으로 ‘제한적인 자유주의적 협약’을 맺은 것이며, 따라서 단절성이 아닌 연속성이 한국 민주화 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배블록과 보수야당은 상호간의 핵심적인 이익을 상호 보장하는 동시에, 지배블록은 이행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고 보수야당은 선거 경쟁의 불확실성을 통해 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조효래 1995, 541). 그것은 지배블록에게는 자신감을 주고 보수야당에게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반면, 기층민중이나 민중운동에게는 패배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 즉 87년 6월항쟁은 절반의 승리였고 그것

에는 절반의 패배가 내장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0여년이 지난 아직도 사회경제적 민주화는커녕 사상의 자유 등 절차적 민주주의까지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한국민주주의의 파행화는 87년 민주화 이행의 유형적 특징이 남긴 필연적인 부정적 유산(조현연 1997b, 147)으로서 상당부분 87년 민주화실험의 성공의 역설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동춘, 1997.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당대.
- 김진균·정근식, 1990. 「광주 5월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 5월 민중항쟁』, 풀빛.
- 김용일, 1996. 「미 정부요원의 한국현대사 충격증언」, 『월간 WIN』 4월호.
- 김호기, 1995.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 사상계 편집부, 1988. 『항소이유서』, 사상계.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1991.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새길.
- 성경륜, 1995. 「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론적 접근」, 임현진·송호근 공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 손호철, 1996. 「한국 민주화 이론 비판」, 여름·가을호.
- _____, 1997a. 「80년 5·18항쟁: 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사.
- _____, 1997b. 「국가·시민사회: 한국정치의 대안인가」,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
- _____, 1999.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1999년 봄호.
- 송호근, 1991. 「권위주의적 노동정치와 노동운동의 성장」,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 안상수, 1995.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동아일보사.
- 이삼성, 1993. 「미국과 제3세계의 정치변동」,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한길사.
- 이영석, 1990. 「이민주구상의 진상」, 『월간중앙』, 4월호.
- 임재경·폴 마틴 외, 1987. 『저강도 전쟁』, 민중사.
-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1호.
- _____, 1991. 「민주화비교연구서설」, 『한국정치연구』, 제3호.
- _____, 1994. 「5공의 민주화투쟁과 직선제 개헌」, 동아일보사, 『5공평가대토론』.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1991. 『윤상원 평전: 들불의 초상』, 풀빛.

- 전원하 엮음, 1990. 『저강도전쟁의 이론과 실제-미국의 반혁명 수출과 제3세계 전략』, 친구.
- 정대화, 1995. 「한국의 정치변동, 1987-1992」,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정상용·유시민 외, 1995.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 조갑제, 1990. 「5·17 기습작전」, 『월간조선』 10월호.
- 조세형, 1987. 「대통령선거와 미국의 영향력」, 『월간조선』, 10월호.
- 조현연, 1997a. 「한국 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외대 정외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7b. 「6월민주항쟁의 이념·주체·전략」, 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당대.
- 조효래, 1995. 「민주화 이행과 민주적 공고화: 한국과 브라질, 에스파냐의 비교」, 임현진·송호근 공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 조희연, 1995.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 임현진·송호근 공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 최석우, 1996. 「아, 통한의 5·15회군」, 『사회평론 길』, 1월호.
- 최장집, 1985. 「해방 40년의 국가, 계급구조와 정치변화에 관한 서설」,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1』 열음사.
- _____, 1989. 『한국 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까치.
- 월간조선 특별취재반. 1987. 「6월평화혁명의 대드라마」, 『월간조선』, 8월호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6월민주화투쟁』, 민중사.
- Cumings, Bruce. 1989. "The Abortive Abertura: South Korea in the Light of American Experience," *New Left Review*, no. 173(January/February).
- Nun, José. 1967. "The Middle Class Military Coup," Claudio Veliz, ed., *The Politics of Conformity in Latin America*, Oxford Univ. Press.
- Therborn, Göran. 1977. "The Rule of Capital and the Rise of Democracy," *New Left Review*, no. 103.